

제1장 사회적경제의 이상과 현실

김신양(성공회대 교수)

1. 서론

사회적경제의 이상과 현실을 논의하기 전에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사회적경제는 최초로 그 개념이 등장한 이후 역사의 발전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해왔을 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개념과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 사회적경제를 표방하거나 이를 주장하는 집단 내에서도 합의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아주 추상적인 수준에서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의 이상이 무엇이며 그 이상은 어떻게 현실로 드러나는가를 논하기 이전에 사회적경제가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회적경제의 개념에 대한 통시적 접근과 근래에 생긴 유사한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가로지르는 작업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단지 정확한 사회적경제의 개념만이 아니다. 시대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의미가 변했다는 것은 그 용어에 대한 정의가 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 용어가 사용되어온 분야와 의미하는 내용 자체가 변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의 축을 따라 사회적경제를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경제가 누구에 의하여 어떤 목적으로 논의되어 왔는가를 알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사회적경제의 이상이 무엇인가를 도출할 수 있고, 그 한계는 무엇이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2. 사회적경제의 의미

사회적경제란 무엇인가? 그것은 대안경제의 사상의 하나인가, 아니면 자본주의기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조직의 운영원리인가? 사회적경제는 학문적 전통을 가지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경제학이라 할 수 있는가? 또는 사회적경제는 경제학의 한 분야인가, 아니면 경제학과는 다른 학문인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하여 정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답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경제는 학문적 영역에서 (정치)경제학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했다가 20세기에 들어 경제부문으로 변화(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에 들어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적경제는 일반(자본주의)기업과 다른 운영방식을 가지는 부문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 및 임노동사회의 종말을 예고하면서 사회적경제는 새로이 등장한 연대의경제 및 민중경제 등 새로운 사회적경제 개념과 공존하는 개념으로 인식되거나 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1) 사회적경제 개념의 등장

사회적경제는 프랑스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학문의 영역에서 기존 경제학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했다. 1830년 뒤누와이에(C. Dunoyer)에 의하여 처음 사용되어(Gueslin, 1998) 이후 지드(Gide)나 왈라스(Walras)에 의하여 발전되었으며, 19세기 말까지 사회적경제는 학문의 영역에서 다루어졌다. 학문의 영역에서 등장한 이유는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초기 자본주의가 그 야만성으로 인하여 다수의 민중이 극심한 노동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었으며 빈곤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드가 말했듯 당시의 지배적인 경제학은 부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지만 “민중의 고통과 그것을 치료할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Gide, 1990) 때문에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는 새로운 사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초기 사회적경제를 학문으로 체계화한 왈라스는 『사회적경제 연구』(1896)에서 보듯, 사회적경제는 당시까지 은폐되어 오다가 산업혁명에 의하여 주요하게 대두된 사회적 문제를 고려한 정치사회경제라 할 수 있다. 왈라스가 구상한 사회적경제의 핵심은 이익과 정의를 화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이러한 점에서 왈라스는 모든 국가의 개입을 거부하는 자유주의 경제학자에 반대한다.

그런데 실천적 사상으로서의 사회적경제의 선구자인 오웬 이나 생시몽, 푸리에 등은 당시 결사체주의(associationnisme)자였으며, 그들은 공통적으로 노동자결사체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야만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자본주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하였다. 이들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 사상을 형성한 이들은 다양한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경제 학회를 설립한 르플레(Le Play)나 공제조합모델을 권장한 라이파이젠(Raiffeisen)은 기독교사회주의자였고, 영국 로치데일의 영향을 받아 소비자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주장한 지드는 연대주의자였으며, 사적소유를 부정하고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시민-생산자의 주권을 보장하는 신용대출제도를 주장한 프루동과 크로포트킨은 무정부주의자였다(Bidet, 2005).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의 결사체에 의한 임금노동제도의 폐지를 주장한 밀(Mill)과 대중결사체를 지지한 왈라스는 오늘날 자유주의자로 간주된다. 이렇듯 사회적경제는 다양한 사상의 교차로에 위치하였으며 각기 주장하는 내용 또한 하나로 통일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을 사회적경제의 선구자라 하는 이유는 결사체(혹은 노동자결사체)의 이상을 가졌으며, 소유, 이윤, 사회불평등, 경쟁과 같은 시장의 작동메카니즘에 대하여 비판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회적경제가 단일한 사상적 체계를 가지는 학파를 형성하지는 않았지만 공통의 비판의식과 조직방식을 가진 시대의 흐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가 다양한 사상적 배경을 가진다는 의미가 현대에 이르러 왜곡되어 해석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기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의 선구자들은 이념적 성향이 다양하였지만 그 이념을 넘어서는 공통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의 전통을 형성했다고 간주한다.

이는 그들이 사회적경제를 자신의 이념에 따라 자의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대 사회적경제를 비판하는 이들 가운데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정치색이 다양한 이들이 사회적경제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사회적경제를 자유주의적이라거나 (자본주의)체제 옹호적이라는 라벨을 붙이곤 한다.

선구자들의 사상과 실천은 현재 사회적경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협동조합과 공제조합의 탄생과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 협동조합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로치데일의 공정 개척자’ 협동조합은 오웬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으며, 생시몽과 푸리에의 자율적인 노동과 생활공동체 모델은 노동자협동조합의 탄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공제조합 조직의 우월성을 주장했던 라이파이젠은 독일에서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신용대출과 보험제도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우리가 사회적경제라 지칭하는 것은 이렇듯 노동자결사체주의가 중심이 된 사상과 현장에서의 다양한 협동조합 및 공제조합 설립의 움직임이 결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사회적경제의 축소 : 자본주의기업과는 다른 경제활동방식

오늘날 사회적경제를 설명하는 방법은 법적지위를 통한 정의와 운영원칙에 의한 정의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두 방법을 조합할 때 가장 적합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Defourny, 2006).

첫 번째 방법은 대부분의 사회적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제도 및 법적 형태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 첫 번째 접근법은 프랑스, 특히 ‘협동조합, 공제조합, 결사체 리뷰(RECMA)’라는 잡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회적경제의 셋 또는 네 구성체로 보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동일하다.

사회적경제의 특성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은 사회적경제가 포괄하는 기업 및 조직의 공통점을 강조하는 방법이다. 핵심적으로는 이 공통점은 활동이 가지는 궁극적 목적의 수준, 그리고 조직양식의 수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경제 고유의 특성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아래와 같은 주요 원칙은 다양한 원천을 조합하는 간명한 방법이다.

첫째, 궁극적 목적이 이윤추구가 아닌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둘째, 운영(경영)의 자율성

셋째,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

넷째, 잉여 분배에 있어 사람과 사회적 목적이 자본에 우선함

궁극적 목적이 봉사인 점으로 보아 사회적경제의 활동은 구성원, 또는 보다 넓은 지역사회에 제공되는 봉사이지 투자된 자본에 대한 재정적 보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이익은 이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활동의 주요동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운영의 자율성은 사회적경제를 공공부문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을 구분하는 주요 요소이다. 사실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경제활동은 일반적으로 모든 결사조직의 역동성의 근거가 되는 넓은 자율성을 가지지 못한다.

통제에 있어 민주성은 이론적으로 ‘1주1표’가 아닌 ‘1인 1표’의 규칙이나 적어도 최고의결기구에 서 구성원의 표의 제한으로 표현된다. 실제적인 실천의 다양성을 넘어 이 원칙은 무엇보다도 구성원의 자격 및 의사결정예의 참여가 일반기업에서처럼 보유한 자본의 정도에 따른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네 번째 원칙은 사회적경제 기업 내 아주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다. 예컨대 자본에 대한 보상의 제

한, 배당금의 형태로 노동자나 이용자 구성원간의 잉여 배당, 활동의 발전을 위한 수익금 적립, 사회적 목적을 위한 수익금 사용 등을 의미한다.

위의 두 정의에서 보듯 오늘날 사회적경제는 더 이상 사상이나 학문이 아닌 ‘경제조직’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드나 왈라스의 기여와 그 것이 학문 영역에 미친 영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는 학문으로 정착되지 못하였다. 이로써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은 과학의 장을 떠나 구체적인 경제의 영역에 들어가 하나의 섹터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가지는 의미는 사회적경제가 더 이상 ‘이론적 틀’을 제공하지 못하고 다른 이론적 도구에 의하여 접근되는 ‘연구의 대상’이 되었음을 말해준다.

20세기에 들어 사회적경제는 조직의 확대와 분화를 겪으며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지만 학문의 영역에서 전통이 단절되었을 뿐 아니라 대안경제사상으로서의 지위 또한 상실하는 시련을 맛보게 된다. 그 이유는

- 첫째, 마르크시즘의 전파 및 노동조합의 탄생으로 인하여 노동자결사체의 이상을 가진 사회적경제가 더 이상 노동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유일한 실천방안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 둘째, 2차 대전 후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으로 인하여 다수 노동계층 및 그 가족의 위험이 공제조합이 아닌 국가제도에 의하여 보호되었으며,
- 셋째, 기술의 발전으로 시장을 통한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노동계층의 생활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조직 자체에 기인한 것으로서 협동조합 진영은 파편적으로 존재하던 협동조합에 대한 이론 및 운영원칙이 정립되고 부문별 조직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공제조합진영은 사회보장제도의 정착이후 공공부문의 보조역할을 하며 제도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과거 사회적경제조직이 노동계층에게 제공하던 사회경제적인 편익의 많은 부분을 국가와 시장이 제공하게 되어 현실적 유용성이 감소하였으며, 마르크시즘과 노동조합의 대두로 노동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과 사상으로서의 위치도 위협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내부 정비의 이유로 결국 사회적경제는 이념과 실천의 측면에서 주변부로 밀려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 사상과 실천으로서의 위치에서 자본주의기업과는 다른 운영원칙을 가진 기업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시민사회라는 영역에서도 멀어지고 사회운동으로서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3) 사회적경제의 쇠퇴와 재탄생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전 세계를 강타한 경제위기는 사회적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경제위기로 악화된 시장은 노동자를 몰아내고, 시장의 역동성에 의존하던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는 더 이상 늘어나는 실업빈곤층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복지국가 또한 위기를 맞게 된다. 구조적 실업과 사회적배제는 급기야 사회양극화라는 우울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며 대안을 갈구하던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개념은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대륙을 건너 남

미에서도 80년대부터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교회, 그리고 대학을 중심으로 새로운 실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민중경제의 싹이 트기 시작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적경제는 여전히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제3섹터’로 인식되었고, 경기가 회복되어 시장이 정상화되면 예전처럼 성장이 이루어져 실업과 빈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 다수의 생각이었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실업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대항이 이루어졌으나 국가정책의 대리자로 인식되었을 뿐 아니라 시장 안에서 활동하고 국가에 의존하던 제도화된 협동조합 및 공제조합 또한 시장의 위기로 타격을 입게 되어 위기극복의 주체가 아닌 위기의 피해자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져 왔으나 80년대부터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정책과 고삐 풀린 금융자본주의는 더 이상 치료될 수 없는 체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더불어 진보진영 내에서도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고 구소비에트의 몰락으로 인하여 사회주의이념 - 엄밀히 말하면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반을 둔 국가주의 - 이 더 이상 대안으로 제안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시장도 국가도 아닌, 또는 그 두 부분의 결합도 아닌 무엇에 희망을 걸어야 하나? 유럽에서는 90년대 중반부터 노동자총파업과 실업자운동으로 새로운 사회운동이 탄생하기 시작하였으며, 제도화된 사회적경제를 비판하는 연대의 경제가 등장했고 국가의 위에 존재하는 국제기구가 강요하는 구조조정과 외채로 경제가 파탄 난 남미는 새로운 개발모형을 찾기 시작하였으며, 독재와 인종말살전쟁으로 기아에 허덕이던 아프리카에서도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이 성행하기 시작하였다. 각기 다른 대륙에서 각기 다른 이름으로, 비공식경제, 민중경제, 연대의 경제, 새로운 사회적경제로 불리는 이 모든 개념은 제도화된 사회적경제를 쇄신하면서도 애초 사회적경제가 가졌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수렴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운동은 21세기에 들어 다른세계화를 위한 이념으로 세계시민사회의 공통분모가 되었다.

3. 사회적경제의 이상

이제 사회적경제의 이상을 말할 시점이 되었다. 이것을 위해 참으로 먼 길을 돌아왔다. 그러나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경제의 이상이 무엇인지 얘기하기 이전에 어디서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의 이상을 찾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의 사회적경제가 진정 대안이 되기 위하여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현재의 불완전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1) 역사의 교훈

우선 전제해야 할 것은 사회적경제의 정의는 다양하고 역사의 발전에 따라 변해왔으므로 사회적경제의 실체에 온전히 접근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사회적경제는

조직의 법적지위나 운영원리에 의해서만 설명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의 이념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사회적경제는 기존 경제학이 고려하지 못한 사람의 문제, 빈곤과 사회적불평등과 같은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경제에 사회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학에 대한 대안으로 탄생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런데 학문으로서의 사회적경제의 맥이 끊어지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을 설명하고 해석해주고 의미를 부여해 줄 이론이 사라졌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의 경제는 자유주의 경제이론에 기반하고 자유주의 사상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왔다는 점을 안다면 이론의 부재가 미치는 결과가 어떠한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사회적경제의 사상적 배경이 다양하고 그 실천 또한 다양할 뿐 아니라 현재 공통적으로 수용되는 정의 또한 없기에 무엇이 사회적경제이고 어떠한 실천이 사회적경제인가를 다른 데서 찾는 것은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한국사회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집단과 연구자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이들이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들이 제안하는 내용 또한 상이하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할 뿐 아니라 그리 걱정할 바도 못된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사회적경제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이상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범답안이나 실천의 전형이 아니라 사회적경제가 이상이 되기 위해서 그 것을 논의하고 그를 통해 그 이상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즉,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말이다.

2) 논의의 출발

그렇다고 모든 논의를 제로에서 출발하자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경제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는 지점을 보면서 왜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가지며 사회적경제에 거는 기대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시간을 거슬러 19세기 초에 사회적경제가 태동할 시기, 선구자들이 가진 열망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경제의 이상이 무엇이었고, 21세기에 이른 현재 세계시민사회가 다른 세계화의 이념으로 연대의 경제¹⁾를 표방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대륙과 국가에 따라 사회적경제가 처한 상황과 인식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사회적경제가 더 이상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한시적으로 봉합하거나 실업흡수를 위한 대책으로서 자활사업을 실시하거나 일자리창출사업을 하는 역할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반세계화운동에서 발전하여 형성된 세계시민사회가 세계사회포럼에서 합의한 것은 저항세력에서 대안세력이 되고자 한 것이고, 그 대안은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아닌 '다른 세계화(또는 대안적 세계화)'를 지

1) 넓은 의미의 사회적경제는 남미를 중심으로 등장한 개념인 민중경제와 80년대에 유럽에서 등장하여 남미 및 아프리카로 확산된 연대의 경제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부문화되고 제도화된 사회적경제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되었으나 애초의 사회적경제의 정신 - 정치경제학의 비판 및 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비판 및 사회개혁프로젝트로서의 사회적경제 - 을 계승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사회적경제의 전통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보면 현재 시민사회 진영에서 논의되는 사회적경제는 포괄적 개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를 이 모든 개념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향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문제가 투기자본에 의한 극심한 사회 불평등을 야기하는 시장유일사상의 지배에 기인하므로 다른 세계화는 다른 경제 없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같이 한다. 그리하여 연대의 경제가 다른 세계화의 이념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모든 것을 상품화한다는 것은 인간과 사물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또한 시장의 운영 원리에 의하여 사고된다는 것이므로 다른 세계화의 과제는 인간의 관계를 계약관계로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상품으로만 인식하는 방식을 전환하는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존의 패러다임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이와 더불어 그 것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 즉 제도가 수반되어야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과 그 토대가 되는 제도, 이것이 다른 세계화가 가능할 수 있는 ‘아리안의 실’일 것이다.

사회적경제의 이상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경제의 대안으로 간주하고 어떤 계획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인가? 재벌개혁? 경영참여? 사회적기업설립? 투기자본규제? 논자들에 따라 의견이 다르고 열거한 제안 중 많은 것들이 논의되거나 실천되어왔다. 그러나 이 각각의 계획이 다른 세계화의 이상을 가지는 많은 이들을 아우르는 공통의 열망이 될 수 있을까? 이 제안들은 실현가능할 뿐 아니라 이상으로 삼기에 충분한 것인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적경제의 이상은 단순히 경제개혁의 과제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까지도 상품화가 되며, 금융자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환경이 파괴되고 극단적인 사회적, 남북간의 불평등이 야기되는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종합적인 대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이상은 경제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정치, 문화,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기반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이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고 또 무엇을 요구해야 할까? 이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가능할 것이나 시장적 조절방식에 대한 대안적 조절방식의 토대는 세계인권선언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세계사회포럼을 비롯한 다른세계화를 논의하는 장에서 공통으로 수렴되는 안이다. 금융과세를 도입하여 시민활동을 지원할 것을 주장하는 세계적인 조직 ATTAC의 부대표를 역임한 귀스타브 마씨아(G. Massiah)는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세계시민운동이 권리존중을 중심으로 대안을 구축한다. 각 사회 및 세계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 모델이 인간을 곤경에 빠뜨리고 구조조정이 늘어난다는 자각이 높아졌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와 반대되는 경향은 국제적 권리를 되찾아가는 길이다...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존중은 모든 이들이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평등하게 수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서 출발한다. 중요한 것은 공공서비스에 어떻게 접근하는가, 어떤 형태로 이를 조직하며, 시장과는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어떻게 다양한 주체가 결합되며, 모두에게 평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기본적 서비스의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다른 경제, 2005)

그러나 '모든 이들을 위한 모든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더불어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모든 이들을 위한 모든 권리 존중은 '모든 이들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민주주의가 '국민의, 국민을 위한 정부'이기도 하지만 '국민에 의한 정부'이듯이 권리존중 또한 '모든 이들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기에 적극적인 시민정신이 요구되는 것이다. 칼 폴라니(K. Polanyi)가 강조했듯이 민주주의란 단순히 규칙으로 이루어진 체계가 아니라 '삶의 이상'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민주주의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융의 지배로 심화되는 불평등과 삶의 환경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 시장의 논리로 무너져 가는 사회적 권리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시민정신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단지 나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의식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권리 또한 지켜주어야 한다는 의식, 즉 '호혜적 연대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그 호혜적 연대성은 시민사회의 원칙이기에 다른 세계화의 이상은 세계시민사회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3) 변화의 과제는 무엇인가?²⁾

우선 기존의 개발 모델의 실패로 새로운 개발 모델이 요구된다. IMF, 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강요에 의한 구조조정프로그램의 실행으로 아시아 및 남미 국가의 경제위기는 오히려 심화되었고 통제되지 않는 투기자본은 환경파괴 및 생존자체를 위협(북부의 개인가구파산, 남부의 식량난민 발생)하면서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복지국가의 후퇴 및 사회적 배제로 인한 극심한 사회불평등은 정치공동체의 기반을 붕괴하게 되고 민주주의의 존립마저 위협하게 된다. 남부 국가 뿐 아니라 북부 국가의 모든 국민의 다수가 사회불평등을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하였듯이 양극화의 문제는 비단 특정한 사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어떤 사회이건 최소한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으면 그 정치 공동체는 존립할 수 없게 된다. 현재의 불평등 문제는 단지 어떻게 일부 빈곤층을 보호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가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극심한 불평등 구조를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시혜적 차원의 복지서비스의 보장이 아니라 교육, 의료, 주택, 고용 등 제반의 서비스를 사회적 권리로 보장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극심한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 -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의 최저소득보장 및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의 격차 감소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4. 사회적경제의 현실

현실의 모순에 대한 저항과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위한 창조라는 두 갈래 길을 동시에 걸어 온 사회적경제는 근대국가의 사회정책의 토대를 제공하면서 자신은 한걸음 뒤로 물러났다가 위기의 시기

2) 이 부분은 그 내용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되므로 필자가 2009년 11월에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에서 발표한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경제의 의미'에서 발췌하였다.

에 요청받는 대타와도 같은 존재였다. 모두 그 선수가 등장하여 전세를 역전시키기를 바라지만 그러한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예컨대 3:0으로 지고 있던 팀이 9회말 투아웃에 모든 주자가 1, 2, 3루에 포진해 있을 때, 타자가 기적적으로 홈런을 날리면 경기는 4:3으로 역전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대타로 나온 선수가 비록 홈런을 날린다 해도 만약 주자가 단지 두 명만 진출해 있었다면, 또는 1명만 진출해 있었다면 역전의 드라마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비록 그 선수가 친 공은 똑같이 담장을 넘었지만(이대호선수가 홈런을 그렇게 쳤건만 롯데는 우승하지 못하는 상황과 비슷하달까).

사회적경제의 현실을 논하기 이전에 야구에 빗대어 말을 꺼낸 이유는 어떻게 하면 위기사 요청받은 선수가 역전의 기회를 맞이하여 홈런을 쳐도 지거나 비기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모든 주자가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해내기 위한 작전을 잘 짜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 평소 팀의 전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과 이 작전은 상대방이 이기고 있으나 궁지에 몰려있음을 전제한다. 그러면 현재의 자본주의체제는 궁지에 몰려있다고 진단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굳이 모든 경제지표와 장황한 정세분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미 전 세계의 모든 국민이 사회불평등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으며, 조절능력을 잃은 시장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를 시작으로 전 지구적 위기를 불러일으키며 이대로는 안된다는 여론이 모아졌다. 아직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는 그러한 정서가 팽배해 있지는 않지만 이미 유럽과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적경제, 연대의 경제, 민중경제가 국가정책의 부분, 또는 전체를 관장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것은 어쩌면 2000년대 지금의 상황이 곳곳에서 기본적인 인권이 유린되고 시민에 대한 탄압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탄생한 19세기 초와 아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현 정부 들어 기본적인 결사의 자유가 탄압받으면서 시민사회가 급격히 위축되지 않았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의 이상이 진정한 대안으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위기에 대처할 만한 수준의 정책을 제출해야 할 것이며, 그 정책은 바람직할 뿐 아니라 실현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이 몇 가지 있다.

1) 지식인, 시민사회, 사회적경제조직의 연대

19세기 후반의 지드나 왈라스, 베버의 전통은 학문의 영역에서 사라지지 않았으며 최근 들어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프랑스에서는 장루이라빌(Jean-Louis Laville)과 사회과학반공리운동인 MAUSS 그룹에 의하여 ‘연대의 경제’로, 캐나다 퀘벡에서는 ‘새로운 사회적경제’로 불리며 전통적 사회적경제를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이념을 정립하고 있다. 다른 학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사회경제학(A. Etzioni, B. Burgenmeier), 경제사회학(R. Swedberg, P. Steiner), 또는 사회적자본(R. Putman)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최근에는 드푸르니(J. Defourny)와 보르자가(C. Borzaga)를 비롯한 유럽 사회적기업연구네트워크인 EMES에 의하여 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으로 사회적경제의 정신을 계승하기도 한다(Bidet, 2005).

이렇듯 사회적경제는 학문의 영역에서 새로이 부활하고 있으나 유럽과 남미, 아프리카에 비하여 아시아에서는 상대적으로 대안적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낙후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사회적경제는 관련 연구자도 적고 연구결과 또한 빈곤한 실정이다. 그것은 아마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식인 집단이 시민사회나 사회운동과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서 대안적 실천을 제안하고 이끌어왔던 것은 현장조직들이며, 이들과 연관된 연구자들이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은 국가정책을 보조하는 것에 만족하면서 체제 내에서의 부분적인 정책만을 다루었을 뿐이다. 그 결과 고용 없는 성장을 예견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고, 실업자를 조직하며 사회적인 실천을 주도하던 시민사회단체는 이론의 빈곤과 정책적 지원의 부재로 정부의 주도에 점차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³⁾.

19세기 사회적경제가 발흥한 이유는 농민, 노동자, 장인이 착취당하는 상황에서 불평등 및 탄압에 대응하며 의식주 및 교육, 보건, 신용대출 등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이 조직된 것은 어려움에 처한 당사자들의 자발성에 더하여 그들의 실천에 영감을 제공하고 사상적 틀을 제공한 지식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럽과 남미에서 새로운 사상이 발전하며 대안이 논의되는 것도 80년대부터 다양한 지식인 집단이 현장과 더불어 꾸준히 연구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는 사회적경제연구회가 있으나 그 활동은 미미하며, 이들 외 다른 집단의 연구가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지만 아직 진지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식인과 시민사회의 연대에 더하여 고민해야 할 것은 시민사회와 협동조합진영을 비롯한 기존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대이다. 사회적경제연대회의 내 생활협동조합연합조직 및 연구소가 회원으로 있지만 이들과의 연대는 회의를 함께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실질적인 조직적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동의 정책에 기반 한 연대활동은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물적 자원이 취약한 시민사회단체가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제정을 확보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미 경제적인 기반이 있는 협동조합의 지원 및 그들과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거대한 협동조합연합회가 교육과 운영을 지원했기 때문이며, 프랑스의 공동체이익협동조합회사도 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CGSCOP)가 초기에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며, 설립이후에는 외부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연대의 경제로 대안경제의 희망이 된 브라질의 경우 80년대부터 노동조합과 대학, 그리고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자발적 실천에 머문 민중경제조직에 기술적 지원하며 전국적 수준의 연대체를 만들고 정부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사상과 실천은 함께 발전하기에 현장과 연구는 공동운명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현장의 활동가들은 연구자들에게 정확한 현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이 처한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전달해주어야 한다. 또한 연구자는 현장에 기반 한 연구를 통하여 정책을 생산하여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현장의 활동가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사상과 연구를 검증하여 공허한 이론이 되지 않고 현실적 힘을 가지는 이론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3)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필자가 발표한 ‘한국 사회적기업의 발전단계(2009)’를 참조할 것.

2) 사회적경제 활동을 사회적권리 확보를 위한 활동으로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한국사회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90년대 말, 지역의 시민사회운동의 연합체가 만들어지고 전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조직적 기반을 갖춘 실업극복 활동은 초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새로운 담론, 항시적인 공공근로의 보장으로 실업급여제도의 도입을 구상했고, 자활지원 사업과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이라는 고용복지정책을 이끌어내었을 뿐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제도 및 바우처제도의 도입 등 사회서비스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짧은 시간에 실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자리창출이 마치 시민사회 고유의 업무인양, 또는 사회적기업 설립이 사회적경제 활동의 전부인양 거기에만 몰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적경제를 경제의 영역에만 한정시키며 사회적경제의 과제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유지 및 발전과 등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가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이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그것은 고용약화와 소득불평등으로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시장의 한계에 대항하여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노동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공동체관계를 회복하는데 기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은 다른 세계화의 기본방향인 권리확보운동과도 상응한다. 사회적기업의 존재이유는 단지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나 서비스 제공,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재정확보에 한정되지 않고 보다 광범위한 영역의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경제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논의의 중심은 재정안정 방안이나 창출한 일자리의 수가 아닌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누구를 위한 어떤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노동조합(trade-unions)운동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그것은 협동조합 이론가이기도 한 웹(Webb)부처의 노동조합이론에 근거한다. 이들에 따르면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사회의식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즉, 새로운 법적기구, 새로운 행동의 원칙, 새로운 희생과 연대의 동기, 새로운 성장 및 투쟁의 도구”가 생기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은 “새로운 권리이며, 노동자의 권리이며, 새로운 정신체”라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통하여 개인의 운명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개인의 희생과 연대를 통하여 집단의 존재를 깨닫게 함으로써 개인의 권리와 집단의 권리가 구분되지 않도록 한다”(Mauss, 1899)고 했다.

영국의 노동조합에 대한 이론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다. 노동조합은 단지 노동자들의 이익을 실현하게 해 줄 조직적 틀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노동자의 권리라는 점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것은 파업을 통한 임금인상과 같은 경제적인 욕구를 넘어 새로운 의식이 형성되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이 되는 것이다. 또한 마르셀 모스(Mauss)는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이 단지 경제조직과 저항조직이 아니라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토대로서 현재는 저항의 틀이지만 미래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장치이며, 자본주의체제 하에서 사회주의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1899)로 간주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으로 대변되는 사회적경제운동은 새로운 전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사회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제반의 사회적 권리보장 운동의 전망을 가지며 새로운 경제활동의 실험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반의 사회적 권리란 경제활동을 시도할 수 있는 권리,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 교육, 문화, 보건, 주거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권리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경제활동을 조직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를 구상하며, 정책을 제안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의 실천은 노동운동 및 시민운동과 조우하며 연대와 협력의 공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 경제활동의 성공만으로는 사회적경제가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도화된 사회적경제의 경험에서 보지 않았는가? 생존전략은 필요하나 살아남는 것이 존재이유가 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남는 가이며, 개별 조직이 아닌 사회적경제라는 이념과 사상이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또 누군가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으니까. 역사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가 이어져 온 것은 그 정신이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21세기 초 현재는 사회적경제의 정신이 새롭게 거듭나기를 요구받고 있고, 사회적경제 조직이 시장에만 머물지 않을 것을 선구자들이 당부하고 있다.

< 참 고 문 헌 >

김신양(2005), 『다른경제』, 실업극복국민재단.

김신양(2009), 「한국사회에서 사회적경제의 의미」,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워크숍 발표자료.

김신양·장원봉(2009), 『사회적경제의 이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사회투자지원재단.

노대명·김신양·장원봉·김문길(2010), 『한국 제3섹터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Bidet, E. (2005), "L' économie sociale la fran aise", Economie et Humanisme.

Gueslin, A. (1998), L'invention de l' économie sociale, ECONOMICQA.

Gide, C. (1900), Economie sociale, Rapport du Jury international, Exposition Universelle de 1900.

Mauss, M. (1899), "L'action socialiste", Ecrits politiques(1997), Fayard.

Walras, L. (1896), Etudes d' économie sociale, Lausanne, Paris.

<인터넷 자료>

블로그 '다른경제' : <http://blog.daum.net/alter-economie>